

한중 고구려 역사 귀속 문제에 대한 재고찰*

— 중국 국사연구의 몇 가지 이론문제를 중심으로

YANG YANG**

【목 차】

1. 들어가며
2. 중국사 서술체계 再建에 대한 토론
3. 중국사 서술체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4. "역사귀속"과 "국사범위"의 개념에 대한 규명
5. 한·중 고구려사 분쟁에 있어서 중국학계의 인식상 오류
6. 나가며

【초록】

중국 동북공정으로 촉발된 고구려 역사 귀속문제는 한중 양국 간의 역사문화 갈등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통일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하여 영토주권론을 내세움으로써 고구려 역사를 민족, 강역 등 측면에서 자국의 '국사'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 학계에서 중국 국사 이론의 구축 및 민족, 강역 등과 관련된 개념에 대한 인식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면서 과거 연구 이론 위에 구축된 고구려사 인식은 점차 이론적 근거를 잃게 되었다. 이 같은 현실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현재 중국 국사 연구의 새로운 동향을 결합하여, 과거 중국 국사 서술에서의 이론적 구축 문제를 다시 돌아봄으로써 한중 고구려 역사 귀속 문제에 대한 중국학자들이 가진 몇 가지 인식 오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중국, 한국, 고구려, 역사귀속, 역사이론

* 본 연구는 China Scholarship Council(CSC)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중국) 상해외국어대학교 東方語學院 박사과정생 (0184101191@shisu.edu.cn)

1. 들어가며

고구려사의 귀속 문제는 한·중 양국의 역사 논쟁 중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다. 양측에서 엇갈린 인식을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국사(國史)”의 정의와 국사의 서술 기준 방면에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나아가 양측이 서로 다른 연구 시각을 갖게끔 하였다. 아울러 고구려사의 귀속분쟁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학계가 일부 역사 이론에 대해 인식 차이가 존재하였으므로 근본적으로 양측이 협의점을 찾는 데 본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였을 뿐더러, 오히려 “오늘의 것으로써 옛것을 논하고[以今論古]” “이론으로써 역사를 거느리는[以論帶史]” 일부 방법론적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오늘에 이르러, 중국 국내에서는 고구려사 귀속문제에 대한 연구의 열정이 이미 식은 지 오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큰 반발감을 가지고 있다.¹⁾ 이처럼 고구려사의 귀속 문제는 한·중 양국의 이해결의 현안으로서 양국의 우호왕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 국내의 새로운 학술 연구 동향과 결합하여 중국사 기술에 존재해 온 이론 구축 문제에 착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고구려사의 귀속 문제에서 보여 왔던 한·중 양국 학계의 의견 차이를 되짚어봄으로써 중국학계에서 한·중 역사의 귀속과 관련된 갈등을 처리함에 있어 가진 몇 가지 인식 오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역사 배경 속에서 “지난 일을 다시 꺼집어낸[舊事重提]” 본고의 논의가 양국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한국 학자 김현숙은 동북공정이 끝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학계의 고구려사 연구는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고 하며, 이 시기의 중국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동북공정식 인식을 변함없이 보완, 심화의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것과 동북공정 기간 동안 필요한 연구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특히 이 기간에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는 ‘고구려는 중국사’라거나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기본 내용은 동북공정식 주장을 견지했다고 밝혀냈다. (김현숙, 「동북공정 종료 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동향과 전망」, 『동북아역사논총』, 53, 2016, pp.31-61 참조) 물론 상술한 내용은 다 사실이지만 중국학계의 고구려사에 대한 심화연구는 사실상 2010년 이후 중국의 인문·사회과학연구의 보편적인 발전과 관계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즉 동북공정 끝난 이후 특히 2010년 이후부터 중국학계에서 배출한 고구려사 관련 연구는 단지 동북공정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보다 학계의 전체적인 연구 활동의 발전 및 진보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 보면, 2007년 이후부터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는 비록 내용적으로 동북공정식 인식을 견지했고 양적으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영향력과 사회·정치적 의미, 그리고 받은 관심도는 전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필자는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고구려사 귀속문제에 대한 연구 열정이 한국보다 많이 식은 지 오래됐다’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2. 중국사 서술체계 再建에 대한 토론

해외 학계에서 민족, 역사, 문화, 사상, 제도 등 다양한 측면들로부터 “중국사”의 거시적인 개념 구축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벌여온 반면,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이란 무엇인가”, “중국사란 무엇인가”와 같은 굵직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극히 드물게 검토되었다. 과거의 중국학계는 “중국”이 라는 나라에 대하여 토론할 필요조차 없는 뻔한 개념으로 인식해 왔다. 학자들마다 이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는 있었지만, 이 문제를 따로 제기하고 다원적이고 전면적으로 서술한 이는 거의 없었다. 2011년에 이르러서야, 중국학자 거자오광(葛兆光)의 『宅茲中國——重建有關“中國”的歷史論述』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순식간에 국내외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²⁾ 그 후 몇 년 사이에 거자오광은 『何爲中國』, 『殊方未遠——古代中國的疆域, 民族與認同』, 『歷史中國的內與外』와 같은 저서 및 논문집의 정리·출간을 통해 “중국”이라는 큰 개념 아래 포함된 “세계”, “동아시아”와 “중국”, “중심”과 “주변”, “정체성[認同]”과 “배타성[拒斥]”, “학술”과 “정치” 등 거시적 문제들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이는 중국학계에서 자국 역사 서술의 재건과 관련된 열띤 토론을 불러왔다.

이러한 분위기에 이끌려 여러 중국 출신 학자들이 연달아 관련 업적을 출간하였다. 예컨대, 고고학자 쉬홍(許宏)은 고고학적인 발굴 연구를 토대로 『何以中國』이라는 책을, 대만 역사학자 쉬취원(許倬雲)은 계통론의 방법에 입각하여 『說中國』이라는 책을, 싱가포르 학자 왕경우(王賡武)는 『更新中國——國家與新全球史』라는 책을, 중국 변강역사문제 전문가 류샤오원(劉曉原)은 『邊疆中國』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들은 모두 새로운 시각 및 세계적인 시각에서 전통적인 중국 역사에 대한 서술을 시도한 연구이며, 따라서 “중국이란 무엇인가” 하는 큰 문제도 점차 중국학계에서 다루는 핫이슈로 떠올랐다. “중국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은 중국인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문제인 한편, 외래 질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역사 발전을 반성하여, 새로운 배경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사고의 과정이기도 하다.

거자오광 선생이 언급한 바 있듯이, 역사상 “중국”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던 세 시기는 바로 북송, 청말 민국 및 현재이다.³⁾

우선 북송 시기를 보자. 澶淵之盟 이후 요나라와 송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 병립하자 어느 쪽이 “중국”이고, 어느 쪽이 “정통”인지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로부터

2) 한국어판 거자오광 저, 이원석 옮김, 『이 중국에 거하라 -‘중국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탐구』, 글항아리, 2012.

3) 葛兆光, 「什麼時代中國要討論“何爲中國”——在雲南大學的演講記錄」, 『思想戰線』, 6, 2017, pp.1-4.

터 춘추지학(春秋之學)이 흥행하기 시작하였고, “존왕양이(尊王攘夷)”, “화이지변(華夷之辨)”의 문제가 “중국”이라는 명칭의 실재를 분별하기 위한 핵심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문화적 의의로서의 한족중국(漢族中國)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다음은 20세기 상반기의 만청(晚淸)으로부터 민국에 이르는 시기에, 비전통적인 외족의 침략을 맞서, 전통 제국에서 현대 국가로 전향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라는 정치적 실체의 수립과 “중화민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구축은 정치적 경향에 대한 사고와 더불어 학자와 정치가들의 열띤 토론을 유발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의 강역사(疆域史), 민족사, 변강사(邊疆史)연구의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그 다음은 바로 현재, 중국이 나날이 강대해지고 발전함에 따라 대외적으로 변동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입각점을 찾아야 할 때다.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서로 다른 지역, 집단, 계층 사이의 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불균형하게 발전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만큼,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초미지급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문제에 대한 토론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외부에서 오는 질의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 속에 언급되는 핵심 내용에 “민족문제”, “주변문제”, “강역문제” 및 “국제문제”가 포함된다. 그 동안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중국 내에서 “중국”을 하나의 전체적인 역사 대상으로 간주하여 스스로의 담론체계 속에서 논의되어 온 것들이었다. 그러나 최근 20여년 사이, 학술이 개방되고 인식이 다원적으로 발전하면서, 서구와 일본(한국도 포함)의 새로운 논의들이 “중국”에 대한 전통인식에 의의를 제기하고 의문점을 가졌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중국 역사를 해독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결론들은 중국내 기존의 역사인식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나아가 중국 학계에서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중국”에 대한 역사 담론들을 새롭게 정비하는 데 자극을 주기도하였다.

이미 거자오광의 책에서 자세히 검토한 바 있지만, 여기서 필자는 개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주변이나 서양 국가의 “중국연구”와 관련된 새로운 이론을 “인식(認識)”, “방법(方法)”, “관점(觀點)”, “사조(思潮)” 등 네 측면에서 다시 요약하고자 한다.

우선, 역사인식의 측면에서 볼 때, 주변국인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의 학자들이 “중국사”가 아닌 “아시아사”를 담론의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중화문화의 영향력이 아닌 각 지역의 주체적 발전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전통적인 동아시아사에 대한 기술함에 있어 “아시아”라는 큰 역사단위를 두드러지게 내세우는 반면, “중국”의 역사중심 작용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처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메이지시로부터 문명사관(文明史觀)과 황국사관(皇國史觀)을 바탕으로 “아시아사”에 대해 대서특필해 왔다는 점은 묵인하고, 오늘날 일본 사학계

의 설정을 보더라도 중국 학계와는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일본 사학계에서는 역사 연구를 아주사(亞洲史), 서양사(西洋史), 본국사(本國史)로 삼분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단지 중국사와 세계사로 양분한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인들의 고유한 전통 사관으로는 아시아를 별개의 역사단위로 잘 보지 않는 관습이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일본 식민사학의 영향으로 한국의 역사 연구 체계도 일본의 삼분법을 따르고 있으며, 역사 기술에서 또한 자국의 주체적 발전을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다.⁴⁾ 특히 전통 역사에 대한 해석에서, 대부분의 주류학자들은 중화문화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도 20세기 90년대에 대만학자 두정성(杜正勝)이 대만을 서술중심에 놓는 “동심원이론(同心圓理論)”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역사기술과 지리구획에 있어 대만의 주체성과 중심 지위를 강조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대만을 원심으로 하였을 때 대만 이외의 유구(琉球), 중국 동남 연해 지역, 필리핀은 제2원권이 되고, 동쪽의 일본에서부터 한국, 중국 동부 대부분지역, 그리고 서쪽의 콰에 이르기까지는 제3원권이 되며, 더 밖으로는 세계사의 범위이다.⁵⁾ 이 이론의 정치적 영향에 대해서 잠시 논외로 하더라도, 이를 단지 하나의 학술 관점으로만 보았을 때, 전통적인 “중국 중심”식 담론법에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20세기 후기에 스킨너(William Skinner)와 하트웰(Robert Hartwell)을 대표로 한 미국 학계에서 “구역사(區域史)”라는 연구방법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중국”을 하나의 전체적인 역사단위로 인식하는 전통적인 중국 연구방법을 크게 무너뜨렸다. 이들은 각각 사회학과 역사학의 시각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써 중국을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눈 후, 각 구역 내의 경제·행정·역사문화적 특징 및 구역간 교류·왕래에 대해 개별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⁶⁾

이러한 연구방법은 많은 서구 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중국을 여러 개

4) 한국의 역사 체계도 동양사, 서양사, 본국사(한국사)의 삼분법을 따르고 있다. 20세기 90년대 이후, 한국학계는 “동양사”를 대체하는 또 다른 역사 인식 체계로 “동아사(東亞史)”를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동양사”에 비해 “동아사”는 지역사(regional history)에 속하는 것으로 본국사 뿐만 아니라 세계사와도 이어져 있다. 현재, 한국학계의 “동아사” 인식 체계 구축은 아직 발전 단계에 놓여있다. 자세한 내용은 柳鏞泰, 『從東洋史到亞洲史: 走向認識體系之重構』, 『江海學刊』, 제54집, 2017, pp.36-40 참조.

5) 杜正勝, 『認識台灣』(歷史篇), 台北: 國立編譯館, 1996 참조.

6) 스킨너의 저서 “The City in late Imperial China”는 사회학적 시각으로부터 출발하여 도시발전을 연구중심으로 중국 明清시기 사회 역사 형태의 변천에 대해 다루었는데, 이는 중국의 지역 역사지리 연구에 방법론적 의의와 준거를 제공하였다. 하트웰은 “Demographic, Political, And Social Transformations of China, 750-1550”이라는 글에서 중국의 한족지역(漢族地區)에 대해 구역을 나누어 각 구역의 내부 발전 및 상호간의 이민 교류에 대해 다루었으며, 동시에 엘리트들의 유동이 중국사회와 행정건설에 중요한 추진 작용을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의 구역으로 나누었고, 동일성을 강조하는 문화적 중국[文化中國]이나 역사적 중국[歷史中國]과는 달리, 서로 다른 지역간의 독자적인 문화 특색 및 지역간 문화의 융합과 충돌에 대한 관찰을 더욱 중시하였다. 겉으로 지역연구를 강조하는 이와 같은 방법이 연구를 더욱 세분화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 인식의 시각에서는 전체적인 중국[整體中國]이라는 개념을 약화시킴으로써 중국이 하나의 국가로서 갖는 강대한 정치·경제·문화적 통합력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사에 대해 서술함에 있어 시시각각 통일성과 동일성을 강조 해온 중국 학계의 전통적 시각과는 현저히 다른 것이다.

또한, 몽원(蒙元)과 만청(滿淸)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것으로, 일본과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서구 학자들은 이들을 중국 역사상의 하나의 왕조가 아닌 세계사로 간주하여 연구해온 경향이 있다. 몽고사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일본의 전문가 혼다 미노부(本田實信)와 스기야마 마사아키(杉山正明)는 “몽고시대사”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⁷⁾ 이들 관점에 따르면, 일본 학계의 몽원사 연구는 세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 중국사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원조사(元朝史)”를 고찰하는 것; 둘째, 유라시아 단대사로서 “몽고시대”를 연구하는 것; 셋째, 세계사의 시각에서 유라시아 전체의 역사 진척과 세계사 발전에 끼친 몽고시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중에 셋째 유형은 현재 중국 이외의 학자들이 점점 보편적으로 인정해 나가고 있는 연구시각이다.

“몽고시대사”라는 개념의 제기는 전통적 “二十四史”의⁸⁾ 범위 안에서 몽원사를 다루는 중국 학계의 관습적인 인식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는 한걸음 나아가 도대체 원나라 역사가 중국사인가 아닌가하는 자극적인 문제를 끌어냈다. 이 외에 보다 도전성을 띤 이론으로 20세기 90년대 이래 흥기한 미국의 “신청사(新淸史)” 연구를 들 수 있다.⁹⁾ “신청사”이론은 더 이상 청나라를 중국역사의 마지막 왕조가 아닌 만(滿)·한(漢)·몽(蒙)·회(回)·장(藏)으로 연합된 대제국으로 간주한다. 또한 정권의 유지는 “만속한화(滿俗漢化)”나 “한문화(漢文化)”가 아니라 만족의 특색을 주체로 한다고 본다. 즉, “신청사”이론은 시·공간적으로 기존연구의 “한족중심론” 및 “중국사”

7) 1991년에 출판된 혼다 미노부의 논문집 『モンゴル時代史研究』와 2004년에 출간된 스기야마 마사아키의 대표작 『モンゴル帝國と大元ウルス』에서 두 저자 모두 세계사의 시각에서 몽원사를 연구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8) “이십사사”란 중국 각 왕조가 편찬한 24종의 사서(史書)에 대한 총칭이다. 역대 왕조로부터 정통적인 사서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사(正史)’라고 한다. 전설의 황제(약 기원전 2550년)부터 명나라 숭정 17년(1644년)까지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였다.

9) “신청사”를 요약하자면, 청사(淸史) 연구에서 “한족”과 “한문화”를 중심으로 해왔던 기존의 틀을 깨고 청조 통일에서의 만족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대표 연구자로 미국 학자 로스키(Evelyn Rawski), 엘리엇(Mark C. Elliott), 크로슬리(Pamela K. Crossley) 등을 들 수 있다.

범위 설정을 무너뜨렸으며, 청나라를 세계사 범위 속에서 강한 민족(滿族)의 특징을 띤 대제국으로 보았다.¹⁰⁾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 학자들의 폭넓은 사고를 불러일으켰던 20세기말 미국 학자 베네딕트앤더슨(Benedict Richard O'Gorman Anderson)이 그의 저서 『상상의공동체』에서 제시한 “민족국가는 후대에 구축된 것이다”라는 견해¹¹⁾ 및 학자 프래신깃트 두아라(Prasenjit Duara)가 그의 저서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에서 “현대 민족국가를 구축했던 사유방식으로 역사를 편찬하지 말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비롯한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이다. ¹²⁾이러한 이론들은 탄생해서부터 서구의 거의 모든 인문사회과학의 영역에 침투되어 각 나라의 역사 담론과 현대 사회연구에 큰 충격을 주었다. 서구 학계에 만연한 포스트모더니즘사조는 자연스럽게 중국학계의 전통적인 중국사 담론에 대한 사고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서구의 현대 민족국가 연구의 맥락을 따라 “옛부터 이미 있었던[古已有之]” 전통적인 서술 이념을 뒤집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중국 역사발전의 특수성을 고수하여 중국적인 역사 척도에 따라 목소리를 내야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겼다.

위의 네 가지를 종합해 보면, 외국 학계에서 “전통 중국사 서술”이라는 큰 개념에 대해 논의할 때, “세계사”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이론으로 중국사를 해체하고 다시 통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인식들이 늘 중국 국내 학계의 고유한 인식과 비교적 큰 충격을 이루거나 심지어 과거에 기대어 왔던 지식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다. 또한, 전체 사회가 발전하고 변동함에 따라 외국 학계에서 제기한 새로운 인식과 이론들이 중국 학계의 낡은 인지적 기초에 충격을 안겨준 한편, 그 동안 간과해 왔던 “중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주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중국”의 국가적 정의(定義)뿐만 아니라 “중국사”, “민족사”에 대한 서술 방법의 문제도 포함된다. “중국사”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어떤 민족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공간적 범위는 어떻게 한정시켜야 하는가와 같은 일련의 문제들이 해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해결은 외부로부터 제기한 도전에 대해 중국학계에서 잘 응할 수 있느냐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중국 스스로가 역사 서술에 대해 반성하고 학술 연구의식의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기점이기도 한다.

10) 新清史에 대해 중국 학계의 긍정적 논의는 姚大力, 「不再說“漢化”的舊故事——可以從“新清史”學習什麼」, 『東方早報·上海書評』, 2015.04.12 등 참고. 부정적 논의는 汪榮祖, 「爲新清史辯護須先懂得新清史」, 『東方早報·上海書評』, 2015.05.17 등 참고.

11) 1983년에 영어권 국가에서 출간되어서부터 2007년 연말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이미 33개 국가와 지역에서 29종의 언어로 출판된 바 있다.

12) Prasenjit Duara, *Rescuing History from the N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참조.

3. 중국사 서술 체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중국 역사 서술 체계의 구축문제에 대한 위의 사고들을 통해, 우리는 중국사의 서술에서 늘 강역(疆域), 민족, 정체성과 같은 키워드들이 동반됨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관건적인 문제는 또 아래와 같은 새로운 사고를 파생시켰다. 즉, 오늘날 중국인들이 자국 문화에 대해 담론할 때 습관적으로 고수해 왔던 “자고이래(自古以來)”나 “고이유지(古已有之: 예부터 이미 있어 왔던)”와 같은 관점들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것이다.

우선 강역 문제를 놓고 볼 때, 先秦시대에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니 곳은 없고 온 땅 안에 왕의 신하가 아닌 사람은 없다(普天之下莫非王土, 率土之濱莫非王臣)”라는 天下觀이 다져진 이래, 이것이 중국 전통적 정치문화의 정수로 자리 잡았다. 역대 통치자들은 “혼일구주(混一九州)”와 “합만국이군지(合萬國而君之)”를 자신의 소임으로 생각하였다. 국가 관념의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전통적인 “국가” 개념은 주로 인문 요소가 가미된 “천하”의 개념이었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 강역과 경계 또한 끊임없이 변동하고 재구성되는 역사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선진 시기, 부락연맹(部落聯盟)으로부터 왕조의 탄생에 이르고, 다시 춘추 전국 시기의 분열과 병합에 이르기까지 혼란스러운 이익 충돌 속에서 점차 강역 개념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진한(秦漢) 이후의 삼국으로부터 남북조 시기까지, 수당의 대일통으로부터 오대십국의 대분열에 이르기까지, 송요금원(宋遼金元)의 병립으로부터 원제국의 통일에 이르기까지, 명나라가 중원으로 물러서고 다시 “천하”를 통일한 대청왕조(大清王朝)에 이르기까지 …… 이처럼 “통일”에서 “분열”로, 그리고 또다시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은 전통 제국 판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였음을 보여준다. 고고학자 쉬홍 선생의 말을 빌린다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형성은 “온 하늘이 별들로 가득한[滿天星斗]” 데로 부터 “달빛이 밝자 별빛은 흐려지는[月明星稀]” 과정을 거쳐 “밝은 달이 하늘에 걸려 있는[皓月當空]” 발전 과정을 경험하였다.¹³⁾

이는 중국의 문화 특색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음을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실체인 중국의 강역·판도상의 역사 체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통일제국의 형성 과정에는 늘 “중심”과 “변두리[邊緣]”라는 문제가 동반된다. “중심” 지역은 점점 안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변두리” 지역은 개방성과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중국 강역에 대해 명확히 정의할 수 없게 한다. 이와 동시에 조공-책봉 관계가 갖는 함의의

13) 許宏, 「最早的中國——二裏頭的歷史位置」, 北大文研論壇 강연, 2016.11.06.

다중성(多重性)은 중국 현실 판도를 구획함에 있어 종종 인식 갈등이 생기게 한다. 따라서 역사상의 강역 변동과 “주변”의 불안정성은 중국의 강역 문제 연구에 많은 애로를 겪게 한다.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고”, “귀속을 구획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가장 큰 두 난제였다. 이는 오늘날 중국이 주변 문제를 처리하고 역사 범위를 구획 짓는 과정에서 종종 “오늘의 것으로써 옛것을 논하는” 오류를 가지는 이유다.

다음은 민족 정체성 문제이다. 광활한 강역과 복잡한 민족관계는 중국 역사 발전 과정에서의 두 가지 큰 특징이다. 이와 동시에 당대의 중국 담론에서 가장 큰 난제이기도 하다. 위에서 서술한 전통강역의 변동성과 변경의 개방성 이외에도 다원적인 민족관계와 민족 정체성의 문제는 중국사의 기술범위를 정하는 데 적잖은 고민을 던져주었다. 고전적 의미에서의 민족관념은 모두 화이지변(華夷之辨)에 대한 분별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천하는 절대적이고 화이는 상대적이다. “화하(華夏)”와 “이적(夷狄)” 간의 구분은 “유교무류(有教無類: 가르침에 유별(類別)이 있을 수 없다)”의 원칙을 고수했다. 바로 이처럼 절대적인 종족경계가 없기 때문에 기나긴 역사 발전 과정 속에서 왕조의 교체, 종족간의 이주, 통혼 및 민족융합 등을 거쳐 “왕조적 정체성”과 “문명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민족의식이 형성되었다. 구체적인 표현형태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자면, 하나는 정통왕조(正統王朝)에 대한 인정이고, 다른 하나는 추상적인 문명가치와 전장제도(典章制度)에 대한 추종이다. 이러한 민족의식은 근대적 의의로서의 민족 정체성과는 현격히 구분되는 것이다.

소위 근대적 의의로서의 민족 정체성은 “중화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말한다.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은 수입된 것으로 처음에는 근대사회가 비전통적인 이족의 침입을 받은 위급한 상황에서 애국 지식인들에 의해 제시되고 제창된 것이다. 20세기 초에 국민과 민권의 의미를 띤 “nation(민족)”이라는 단어가 일본을 통해 중국에 수입되었는데, 이는 ‘state(국가기관)’의 함의와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에 정립된 “국족(國族)” 개념으로서의 “중화민족”은 고대 중국의 전통적인 민족이념과는 명확히 다른 것이다.

중국 학자 페이샤오통(費孝通)은 “중화민족다원일체구도(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이론을 제기한 바 있다.¹⁴⁾ 그가 말한 “다원일체”적 특색은 중화민족의 구성 전반에 대해 높은 층위에서 거시적 개괄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화민족”을 “자재(自在)”의 민족 실체로 보았다는 점은 여전히 담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역사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 “동일성”의식의 존재여부를 막론하고 전통적인 “화하족(華夏族)”을 중화민족과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판단했을 때, 전통 중국사 구축에

14) 費孝通,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9 참조.

대해 담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고금의 민족개념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이 되었다.

위의 두 측면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오늘날의 중국 영토와 민족관계 문제의 역사적 근원을 토론할 때 고수해 왔던 “자고이래”라는 관념에 대해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일찍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에 일부 학자들은 나라의 통일을 수호하고 민족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고이래설(自古以來說)”을 제시하였다. 이것의 이론적 근거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토 범위를 근거로 역사적인 강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즉, “중국의 역사는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안에서 현재와 과거에 존재하는 각 민족의 역사로서, 그 범위는 역사상 당시 중원 지역에 세워졌던 각 왕조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중원강역 밖에 속했으나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있는 각 민족과 지역도 포함되어야 하고”, 따라서 “중국은 자고로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며”, 역사상 각 민족 간의 관계는 “하나의 민족대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오늘의 것으로써 옛것을 논하는” “상소법(上溯法)”은 주로 당시 특수한 정치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해당 논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늘날의 주권영토로써 역사상 왕조의 강역을 비교하고, 현대 국족의 개념을 역사상의 민족관계와 동일시한 것이다.¹⁵⁾ 그 후로 이러한 주장이 학계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후속적인 역사연구에서 “영토”개념과 “강역”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학술착오가 여전히 종종 발생하고 있다.¹⁶⁾ 특히 일부 변강사 연구영역에서 학과구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일부 학자들이 관련문제를 처리할 때 여전히 낡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종 “이론으로써 역사를 거느리는(以論帶史)” 학술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

상술한 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사의 서술 방식은 중국의 전통강역, 민족관계, 민족 정체성 등과 밀접히 관련된다. 그러나 전통적 의미의 왕조강역과 민족관계는 현대에 구축된 민족국가의 영토나 국족의 개념과는 본질적인 구별을 갖는 것이다. 만약 신중히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전통 중국사에 대한 서술에서 “자고이래”라는 인식 오류와 “오늘의 것으로써 옛것을 논하고”, “이론으로써 역사를 거느리는” 학술적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오늘날 중국 사학계의 학과 구분은 아주 명확하다. 민족사, 변강사, 중

15) 孫祚民, 「開創中國民族關係研究的新局面」, 『晉陽學刊』, 3, 1985, p.61.

16) 1980년대에 “실사구시”의 사상노선이 수립되고 중국학계가 민족이론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일부학자들이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였다”라는 관점과 서로 다른 의견을 연달아 제시하였다. 또한 1981년의 “중국민족관계좌담회”에서는 처음으로 전문가들이 나서 이에 대해 토론하고 분명히 하였다.

외관계사등과 같이 여러 개의 큰 부류로 나뉜다. 이로부터 명확히 드러나듯이, 이는 오늘날 중국의 영토분계선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국경 안에서의 민족교류가 민족사이고, 국경 밖의 민족관계가 중외관계 사이며, 핵심 지역이 내지(內地)이고 주변지역이 변강사(邊疆史)의 연구영역이다. 이러한 학과구분은 방대한 중국사 기술을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범위 속에 집합시켰으므로 중국사 서술을 위한 법률적 요구를 더해 주었다. 이는 전통적인 중국사 서술을 기초로 한 “국사범위”이고, 주권문제에 대한 사고를 기초로 한 정치개념성의 문제이지 능동적인 학술적 문제는 아니다. 전통 중국사의 구축과 관련된 서술에서는 “국사범위”를 하나의 하위개념으로 설정하여 이와 명확히 구분지어야 할 것이다.

위의 문제들을 잘 풀어야만 중국사에 대해 보다 전면적이고 논거가 충분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학계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국사범위” 구획으로 전통 중국사 서술방법을 견주는 식의 인식 오류가 여전히 존재하고, 전통 왕족 강역 및 민족관계를 현대 민족국가의 영토 및 국족의 개념과 혼용하는 현상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서로 다른 영역간의 학술 관점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일부 관건적인 문제가 인식 상 명확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국초기와 같은 특정 시기에 형성된 일부 고정된 사고가 여전히 학술 연구 영역에 은폐되어 있다.

4. “역사 귀속”과 “국사 범위”의 개념에 대한 규명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전통 중국사의 서술에서 민족, 강역, 정체성 등 세 가지 문제는 시종일관 피할 수 없는 관건적인 문제이다. 이들은 고금관계를 잘 처리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한 어려운 것이다. 특히 변강사(邊疆史) 연구 영역의 “국사 범위”와 “역사귀속”에 관한 문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종전에 중국 학계에서 “국사 범위”의 구획 문제를 논의할 때 늘 “역사 귀속”문제와 관련된 논쟁을 함께 다루어 왔다. 관련 논의는 주로 중국 변강사 연구에서 주변 국가와 역사 문제로 갈등을 빚었을 때 집중적으로 언급되었던 것이다. 특히 동북 변강사 연구에서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현재 중·한 양국의 영토에 걸쳐 있는 고대 민족국가에 대해 언급할 때 학자들이 종종 해당 영역의 고대 역사 성격에 대해 고찰하곤 한다. 일례로 2004년의 “동북공정” 문제로 중·한 양국의 고구려사에 대한 논쟁을 벌였는데, 중국학자들이 “역사상의 정치적 관할 범위”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인식이 점차 형성되었다. 동시에 영토주권으로 “국사범위”를 구체짓는 이론을 결합함으로써 예부터 해당지역에 존재했던 민족국가를 자고로 중앙왕조에 종속되어 온 소수민족정권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러한 인식은 애당초 해당영역 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보편적이고 공통된 인식으로서 그 후 관련된 학술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깊은 영향을 끼쳤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사범위”의 구체이라는 것은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영토를 기반으로 하여 전통적 중국사 기술에 법률적인 의미를 더한 정치성을 띤 개념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의 내용이 포함되는데, 하나는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역사와 현대에 속한 각 민족의 역사에 대한 담론이다. 여기에는 역사상 중원지역에 나라를 세웠던 각 조대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중원왕조의 강역 밖에 존재하였더라도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내에 속하는 각 민족과 지역까지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제한된 의의로서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사로서, 1949년 건국 이후의 현·당대사 부분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국사 범위”라는 개념 속에는 현존하는 공화국 영토 안에서 존재했던 중국 역사의 과거와 현재를 망라하는 것이다. 언뜻 보았을 때, 이 속의 일부 이론은 건국 초기에 바이수이(白壽彝)가 제시했던 역사 “상소법(上溯法)”과 겹치는 곳이 있어 보이나, 실제로 양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17)전자는 학술 연구에 정치적인 색채를 입힌 것으로 전통중국에 대한 역사 서술을 현대 정치 측면의 영토범위 안에 잘못 가둔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오로지 영토주권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 정치 영역의 개념으로 중국 영토 내의 각 민족과 지역이라는 역사 담론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이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국사 범위”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은, 거시적이고 방대한 학술적 측면에서의 “중국사” 기술을 고정적인 영토의 개념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에서 개념을 혼용해 온 현상에 대해 되짚어보고 간단히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로써 비롯된 역사 인식의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 논쟁사건을 해결하는 데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 동북 변강사 연구에서 “역사정치 관할(歷史政治管轄)”을 역사 성격의 판단 기준으로 하는 이론방법은 탄치상(譚其驤)등의 강역이론을 계승한 민족사학가 쑨진지(孫進己)의 이론을 기초로 한 것이다. 18)쑨진지의 주장에 따르면 “국사 범위”는 현실

17) 바이수이(白壽彝)의 역사 상소법(上溯法)에 대해서는 白壽彝, 「歷史上祖國國土問題的處理」, 『光明日報』, 1961.05.05 참조.

18) 탄치상(譚其驤)의 중국 강역이론에 대해서는 譚其驤, 「歷史上的中國和中國疆域」, 『中國邊疆史地研究』, 1, 1991, pp.37-45 참조.

적인정치 문제인 반면, “역사 귀속”은 국가나 민족의 “역사상의 정치적 귀속”으로 마땅히 그 당시의 정치적 관할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응당 조공·책봉 체제라는 구체적인 형식을 통해 신속(臣屬)의 성격을 규정해야한다는 것이다.¹⁹⁾ 그 후, 해당 영역 학자들은 대부분이 이론에 기초에서 연구를 벌려왔을 뿐, 관련 이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한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이론에서 언급된 일부 개념이 인식 오류와 불완전한 부분이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는 국외의 학술적 인식과 상호 충돌하는 분쟁 사건을 불러왔다.

우선, 쑨진지가 언급한 “국사 범위”의 구획 문제부터 살펴보자면, 그는 “국사의 범위는 하나의 현실 문제로서 오늘날의 국경에 대한 인정여부와 관련되며”, “국경의 설정은 국제법에서 지정된 세 가지 원칙을 준거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²⁰⁾ 그렇다, “국사 범위”의 설정은 하나의 현실성을 띤 정치 개념이다. 그러나 해당 이론에서는 “국경[國界]”과 “국사구획” 가운데서 어느 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조건인지의 문제를 뒤집어 놓았다.

앞서 필자가 분석했듯이, “국사 범위”구획의 의의는 현존하는 국경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을 토대로, 해당 국경 범위 내에서의 전통 중국의 역사 서술에 대해 검토한다는 데 있다. 이중 “국경 문제”는 반박할 수 없는 법률적 의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심의해야 할 문제적 기초가 아니다. 그러나 쑨진지가 설정한 “국사범위”는 “국경”을 역사 서술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를 검토해야만 성립 가능한 “비안정적” 조건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지적한 “역사귀속”은 근본적으로 해당 민족정권과 국가정권이 갖는 역사상의 귀속과 성격을 의미한다. 그리고 쑨진지는 “역사 귀속”을 “주권영토”의 설정과 결부시킴으로써 “역사상으로 중앙왕조의 관할에 예속되어 있고, 그 강역 또한 기나긴 시간의 발전 변화를 거쳐 국제법의 인정을 받는 현재의 중국영토에 속하기 때문에 이 기간의 역사는 중국사에 속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²¹⁾

이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사귀속”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이곳의 “귀속”은 마땅히 두 측면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첫째는 해당 민족정권의 역사적 속성이고, 둘째는 지나간 역사의 한 단계로서 오늘날의 중국이 이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대의 주변 민족이나 국가의 정권성격에 대해 자체의 학술적인 기준으로 토론하고 규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대적 의의로서의 국가가 이미 사라진 민족역사에 대해 절대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가 하는

19) 孫進己, 『俯仰集: 孫進己文集』,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3, pp.113-119.

20) 孫進己, 「國際法中關於確定土地、民族政權歸屬的原則」, 『中國東北民族與疆域研究』, 百花文藝出版社, 2001.

21) 孫進己, 『俯仰集: 孫進己文集』, p.114.

것은 쉽게 결론지을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해당 민족이 역사발전 과정 속에서 기타 민족이나 국가와 밀접한 왕래가 있어 왔던 경우에, 이러한 근거로써 한 단계의 역사가 누구의 것이고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쑨진지가 제시한 이상의 “국사 범위”의 구획과 “역사 귀속”의 성격 확정에 대한 기준을 중국내에서 “국사”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일정한 기준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두 주권국가간에 존재하는 역사분쟁을 해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두 주권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주권영토와 역사적 강역을 비교할 수 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해 특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전에 중국학계에서 답습해 온 이론적 근거가 마치 국제법의 규정에 부합되고 중국 변강사 연구에 든든한 법률적 담보를 제공해 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이는 근본적으로 “국사 범위”와 “역사 귀속”이라는 개념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간과하였다. 스스로를 중심에 놓는 “국사 범위”의 구획과 대조적으로 “역사 귀속”에 대한 검토는 두 나라 사이의 갈등과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련국가의 학술연구의 자주권 문제와 관련된다.

보통 역사상의 강역에 대해 논할 때, 우리는 변화 발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현재 중국의 영토에 대해 언급할 때는 실제적이고 합법적인 통제구역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국사 범위”라는 것은 곧 실제적이고 합법적인 통제구역 안에서 중국의 각 민족, 각 지역의 역사발전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 귀속”이라는 개념 속에 언급된 고대국가 역사는 고대강역의 개념을 기초로 성립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는 옛날의 역사 강역을 토대로 발전되어 왔지만, 그 속에는 확실한 역사적 동기와 법률적 보장이 들어있다. 그러나 고전적 의의로서의 왕조의 “강역”과 현대 민족국가 설립에서의 “주권영토”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국사범위”의 설정과 전통역사의 귀속에 대한 한계 설정을 관련지어 살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중국 측은 단지 “국사 범위”의 입장에서 오늘날의 영토에 존재하는 과거의 민족역사를 “국사”범위에 포함시켜 기술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영토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하여 이 영역 안에 존재했었던 고대역사가 현대의 중국에만 속한다는 독자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귀속 문제”는 사실상 갈등의 산물인 것이다. 곧 양쪽이 어느 한 문제를 놓고 쟁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명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양쪽의 인식차이 때문에 의견 일치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귀속 기준의 설정에 대한 의견차이와 갈등유발의 원인은 사실상 같은 문제로서, 양

쪽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다. “역사 귀속”에서 말하는 “역사”는 고대강역의 변동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오늘날의 영토기준으로 어느 쪽에 속하는지 판단내릴 수 없다. 또한 역사상의 어느 한 시기에 긴밀한 관련을 맺었다고 해서 현대국가가 해당 시기 역사에 대해 절대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우리는 마땅히 이런 미세한 이론적 오류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이는 관련 학술 연구의 기초를 더 잘 다듬기 위한 것이며, 더불어 현실속의 역사 분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5. 한·중 역사 분쟁에 있어서 중국학계의 인식상 오류

고구려사 문제에 대한 중·한 양국의 담론은 중국 국내에서 관심이 뜨거웠으나 점차 식어가는 과정을 겪었다. 이 문제는 한국 학계가 중국 학계의 고구려사 성격 규정에 대해 반박하고 이를 한민족 역사 발전의 구성 부분으로 설정하면서 처음 생겨난 것이다. 이는 양국 학계, 나아가 일반 민중들의 열띤 논쟁을 불러왔다. 한국 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온 데 반해, 현재 중국에서 고구려사 문제에 대한 검토는 아주 뜸하다. 그러나 앞서 “중국사” 기술의 구축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현재 국제 학계가 중국의 학술발전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으며, 중국 국내 학계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아낼 수 있다. 중국 국내 학술 환경이 새롭게 바뀌고 있고 학술의 사유방식 또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낡은 인식 토대로는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하는 현실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다. 이는 학술의 발전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사이의 외교 문제를 처리하는 데도 불리하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필자는 앞선 연구 성과에 대한 정리에 덧붙여 새로운 인식의 시각에서 고구려사의 분쟁 문제를 재검토하고, 이 속에 나타난 중국측의 인식 오류를 바로잡음으로써 중·한 양국 간의 현실 갈등을 해소하는 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보고자 한다.

먼저 고구려 역사 문제에 대한 중·한 양국의 쟁점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은 여러 측면들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고구려 민족의 기원에 대해 인식과 관련된 것이다. 고구려의 민족 기원설로 상인설, 예맥설, 부여설, 고이설 등이 있는데, 중국 학계에서는 이들 민족이 활동했던 구역이 모두 오늘날 중국 동북지역과 환발해지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구려 민족은 중국 동북 지역의 소수민족으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2) 그러나 한국 학계에서는 역사상 만주 남부 지역에서 생활했던 민족 집단이 갖고 있는 “비파형-세형 동검” 문화와 중원의 청동기 문화가 명확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문화를 전통 “중국” 문화의 일부로 치부할 수 없으며, 이 지역에 생활했던 민족 또한 중원의 한족과는 다른 이민족이므로 고구려 민족을 전통 중국 민족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본다.²³⁾

둘째, 고구려와 중국 역대 왕조 사이의 신속(臣屬) 관계에 대한 것이다. 중국 학계에서는 고구려가 건국하면서 중원 대륙 왕조와 조공·책봉의 정치관계를 유지해 왔고 정권의 합법성은 중원왕조의 승인여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고구려가 중원 왕조에 예속된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한다.²⁴⁾ 반면, 한국 학계에서는 “조공-책봉 체제”는 단지 동아시아의 외교형식 뿐 중원 왕조가 고구려의 통치권을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게다가 1세기 전후로 고구려의 “독립성”과 “확장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정권의 성격을 중국 역사상 존재했던 중원 왕조의 소수민족 지방 정권인 것으로 간단히 결론지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²⁵⁾

셋째, 고구려와 수당(隋唐)의 70 여 년간의 전쟁에 대한 것이다. 중국 학계에서는 중원 왕조 통치자가 일정한 강역 의식에서 출발하여 발기한 왕조 내부의 “통일전쟁”인 것으로 보는 반면, 한국 학계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원” 지배 체제와 고구려의 “확장정책” 사이에 생긴 갈등 때문에 일어난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 국가 안에서 일어난 “통일전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²⁶⁾

넷째, 고구려가 멸망한 뒤 유민(流民)의 이동과 관련된 문제이다. 중국 학계에서는 대부분이 유민이 중원 대륙에 흩어져 한족에 받아들여지거나 동화되었으므로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⁷⁾. 그러나 한국 학계에서는 중국에 유입한 고구려 유민은 다수가 포로이고 민족문화가 존중되고 계승되지 못하였으나, 발해나 신라에 흘러든 고구려 유민은 자발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적 기초의 관점에서 볼 때 고구려와 한민족 사이의 관계가 보다 밀접했다고 본다.²⁸⁾

이외에도 중국 학계에서는 발해, 고구려, 고려 사이의 계승관계를 부정하는 경향이

22) 대표적으로 李淑英, 「高句麗民族起源研究概述」, 『通化師範學院學報』, 3, 2006, pp.113-119 참조.

23) 대표적으로 조법중, 「中國學界의 東北古民族 및 古朝鮮研究動向과 問題點」, 『한국고대사연구』, 33, 2004, pp.23-39 참조.

24) 대표적으로 劉子敏, 「中國天下秩序下的高句麗」(미출판), 高句麗國際學術大會발표논문, 2004 참조.

25) 대표적으로 여호규, 「中國天下秩序下的高句麗」(미출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 학술발표회 발표논문, 2003.

26) 대표적으로 박경철, 「中國學界의 高句麗 對 隋·唐 70年戰爭 認識의 批判的 檢討」, 『한국고대사연구』, 33, 2004, pp.57-73 참조.

27) 대표적으로 楊軍, 「高句麗人口問題研究」, 『東北史地』, 5, 2006, pp.11-16 참조.

28) 대표적으로 申滢植, 「고구려의 멸망과 유민 동향」, 『고구려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참조.

있어, 고구려의 역사 발전과 한국 고대 국가의 건립 및 민족 문화의 발전이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본다.²⁹⁾ 그러나 한국 학계에서는 발해국을 고구려의 유민이 세운 것이고 고구려의 계승국(繼承國)이며, 고려 또한 “우리나라는 옛 고구려이기 때문에 고려로 불린다(我國卽高句麗之舊也, 故稱高麗)”는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건국되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한민족 역사에서 위와 아래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본다.³⁰⁾

위의 분석을 토대로 보아낼 수 있듯이, 한·중 양국은 고구려의 역사 성격에 대한 판단에서 커다란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역사 귀속권 문제에 있어서도 비교적 치열한 분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양국의 국정현실과 역사인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양국의 학술연구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 학계에서 고구려사 귀속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 보인 개념 혼용의 인식 오류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연구의 출발점으로부터 보았을 때, 중국 학계의 고구려사 연구는 변강사 연구를 토대로 건립된 것이다. 그러나 변강사 연구의 일부기준은 현실속의 역사 분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원용될 수는 없다. 위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중국은 광활한 영토와 다민족 국가라는 현실 때문에 관련된 역사 연구에 대해 부문별로 나누어 보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민족사, 변강사, 중외관계사 등이다. 이중 변강사 연구는 오늘날 중국의 영토 구획을 기준으로 역사상 해당 지역 내의 각 민족역사의 발전 변화에 대해 중점을 두어 논의한다.

중국 건국 초기로부터 현재까지, 몇 십년의 발전을 거쳐 변강사 연구는 독자적인 특색과 파급 범위가 넓은 하나의 성숙된 학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고구려사를 대표로 한 역사 귀속 논쟁에 대한 연구에서 “오늘의 것으로써 옛것을 논하는” 이론적 착오가 일부 나타났다. 예컨대, 고구려 민족의 기원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 학계는 심도 있고 정밀한 발굴을 통해 다민족을 원류로 한다는 결론을 얻어냄으로써 고구려사의 연구에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민족원류에 대해 정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자들은 한국학계와의 귀속논쟁에 빠져 주권영토의 개념을 혼용함으로써 고구려를 중국 역사상의 소수민족으로 단언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현재 중국이 고구려사에 대한 전속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 연구의 치중점을 놓고 볼 때, 중국학계는 고구려 정권의 성격에 대해 논할

29) 대표적으로 孫進己, 「關於高句麗歸屬問題的幾個爭議焦點」, 『東北民族史研究』, 1994. 楊春吉·耿鐵華 主編, 『高句麗歸屬問題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0, 재수록, pp.96-97 참조.

30) 대표적으로 박용운, 『고려의 고구려계승에 대한 종합적 검토』, 일지사, 2006 참조.

때 주로 전통적인 “조공관계”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이는 중국 학계가 민족 관계사를 연구할 때의 관습중 하나로 역사상 각 민족 간의 교류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중·한양국의 고구려사의 귀속 논쟁에서도 조공-책봉 관계로써 역사상의 고구려와 중원왕조 사이의 정치관계 및 고구려 국가정권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며, 이를 고구려사가 “중국역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근거로 발전시키기까지 하였다.

이중 가장 큰 논리적 문제는 곧 고대의 정권 속성으로 현재 국가의 주권 소유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비록 고구려와 중원왕조의 신속관계를 인정하고, 그 영토 또한 당시 중원 왕조 강역의 일부분이며, 그 옛터의 대부분이 오늘날 중국의 주권 영토 내에 위치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이 역사에 대해 중국이 전속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역사와 타민족·국가 사이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연구방법과 연구이론으로부터 볼 때, 중국 학계의 가장 큰 실수는 “국사 범위”와 “역사 귀속”의 개념 차이를 혼용했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사 범위”의 구획은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전통적인 중국사 기술에 법률적인 의의를 더한 정치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구려의 옛터가 존재했던 지역은 오늘날 중국의 합법적인 영토이다. 그렇다면 국사 서술의 완전성에서 출발했을 때 중국에서는 이 역사에 대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역사 귀속”은 사실상 양쪽의 소유권 분쟁 과정에서 생긴 갈등의 산물로서, 판단 기준 자체가 주관성과 불일치성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국사 연구 기준으로 역사 귀속에 대한 판단을 내렸을 경우, 상대국이 이 문제의 판단에 대해 갖고 있는 증거들을 고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필연적으로 “이론으로써 역사를 거느리고”, “옛것으로써 오늘의 것을 논하는” 방법론적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중 양국의 고구려사의 귀속 문제에 대해 다루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제들 사이의 속성에 대해 잘 구분해야 하고, 각 이론개념이 포함하는 심층적 의미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인식의 치밀하지 못함으로 학술적 착오를 범하는 실수를 가급적 피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측에서는 과거에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간과했던 일부 이론적인 오류에 대해 다시 반성해 봄으로써 근본적으로 한·중 양국의 고구려사 귀속에 대한 논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6. 나가며

거자오광 선생이 지적했듯이, 중화민국이 청나라를 교체하여 방대한 강역과 서로 다른 민족을 이어받으면서 자연스레 대청제국이 남긴 문제들도 떠안게 되었다. 이 문제들은 현대 중국의 정치난제로 진화하였다.³¹⁾ “민족”과 “강역”은 고금의 중국 관련 담론에서 불가피한 화제들이다. 이는 한편으로 현실 속의 정치 난제로서 국가의 노선과 정부의 결책을 시시각각 좌우지한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학술 연구에서의 관건 과제로서 학술의 방향, 학과의 구분 및 학술 이론의 건설에 영향을 준다. 과거 중국에서는 역사 문제에 대해 기술할 때 항상 문을 잠그고 스스로의 담론 체계에서 “중국”을 하나의 전체 역사 단위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사회 발전에 따라 국제 학계가 중국 역사 기술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새로운 시각들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중국 국내의 학술 연구가 점점 더 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불가피하게 당대 중국학자들로 하여금 자국 역사 기술에 대해 반성하고 “중국”과 관련된 역사 기술들을 새롭게 정비하도록 자극을 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의 학술 환경이 새로워지고 학술적 사고가 변화함에 따라 과거의 일부 낡은 지식기초가 급변하는 역사의 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 측은 마땅히 전통적인 인식 오류를 재검토하고 제때에 수정함으로써, 학술 발전과 현실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나은 방법과 근거들을 제공해야 한다. 이중 한·중 양국의 고구려사의 귀속 논쟁을 예로 보았을 때, 이 문제는 국내외 학술 연구 기준의 차이와 역사 인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중국 학계가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서 이론이 박약한 등의 결함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본고는 곧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역사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국사 범위”와 “역사 귀속”이라는 두 개념의 구분과 사용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고, 새로운 시기에 중국 국사서술을 구축함에 있어 마땅히 주의해야 할 일부 관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더불어 간단히 언급하였다. 한·중 학계에서 관련 역사 과제의 연구와 현실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바이다.

31) 葛兆光, 「什麼時代中國要討論“何爲中國”——在雲南大學的演講記錄」, 『思想戰線』, 6, 2017, p.6.

【참고문헌】

- 高句麗研究會, 『中國東北工程和韓國學界的應對』, 여유당, 2008.
- 김현숙, 「동북공정 종료 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동향과 전망」, 『동북아역사논총』, 53, 2016, pp.31-61.
- 박용운, 『고려의 고구려계승에 대한 종합적 검토』, 일지사, 2006.
- 박정철, 「中國學界의 高句麗 對 隋·唐 70年戰爭 認識의 批判的 檢討」, 『한국고대사연구』, 33, 2004, pp.57-73.
- 申潁植, 『高句麗史』,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 申潁植·崔圭成, 『高句麗是否是中國史: 中國“東北工程”的問題所在』, 白山資料院, 2004.
- 조범중, 「中國學界의 東北古民族 및 古朝鮮研究動向과 問題點」, 『한국고대사연구』, 33, 2004, p.23-39.
- 여호규, 「中國天下秩序下의 高句麗」(미출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 학술발표회 발표논문, 2003.
- 本田實信, 『モンゴル時代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91.
- 杉山正明, 『モンゴル帝國と大元ウルス』,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4.
- 本尼迪克特·安德森, 『想像의 共同體』增訂版, 上海人民出版社, 2016.
- 白壽彝, 「歷史上祖國國土問題的處理」, 『光明日報』, 1961.05.05.
- 杜正勝, 『認識台灣』(歷史篇), 台北: 國立編譯館, 1996.
- 費孝通,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9.
- 葛兆光, 『宅茲中國——重建有關“中國”的歷史敘述』, 中華書局, 2011.
- _____, 「什麼時代中國要討論“何爲中國”——在雲南大學的演講記錄」, 『思想戰線』, 6, 2017, pp.1-4.
- 柳鏞泰, 「從東洋史到東亞史再到亞洲史: 走向認識體系之重構」, 『江海學刊』, 2017, p.36-40.
- 劉子敏, 「中國天下秩序下의 高句麗」, 高句麗國際學術大會 발표논문, 2004.
- 李宗勳, 『韓國社會의 高句麗意識與我們的研究方法』, 學會論文(未出版).
- _____, 「韓國高句麗研究及其史觀——以高句麗歸屬問題爲中心」, 『史學集刊』, 2004.
- 李淑英, 「高句麗民族起源研究概述」, 『通化師範學院學報』, 3, 2006, pp.113-119.
- 孫進己, 『俯仰集: 孫進己文集』,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3, p.114
- _____, 「國際法中關於確定土地、民族政權歸屬的原則」, 『中國東北民族與疆域研究』, 花文藝出版社, 2001.
- _____, 「關於高句麗歸屬問題的幾個爭議焦點」, 『東北民族史研究』, 1994.
- 孫祚民, 「開創中國民族關係研究的新局面」, 『晉陽學刊』, 3, 1985, p.61.
- 譚其驤, 「歷史上的中國和中國疆域」, 『中國邊疆史地研究』, 1, 1991, pp.37-45.
- 汪榮祖, 「爲新清史辯護須先懂得新清史」, 『東方早報·上海書評』, 2015.05.17.
- 楊春吉·耿鐵華 主編, 『高句麗歸屬問題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0, pp.96-97.
- 楊軍, 「高句麗人口問題研究」, 『東北史地』, 5, 2006.
- 姚大力, 「不再說“漢化”的舊故事——可以從“新清史”學習什麼」, 『東方早報·上海書評』, 2015.04.12.

Prasenjit Duara, *Rescuing History from the N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Robert M.Hartwell, *Demographic, Political, and Social Transformations of China, 750-1550*
,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1982.

William Skinner, *The City in Late Imperial China*, Univ Microfilms Intl, 1977.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中國, 韓國, 高句麗, 歷史歸屬, 歷史理論				
Key Words	영문	China, Korea, Koguryo, The Historical Ownership, Historical Theory				
<div>A New Review on the Historical Ownership of Koguyo between Korea and China : Focusing on Some Theoretical Problems in Chinese History studies</div> <div>Yang, Yang</div> <p>The issue of Goguryeo’s attribution, sparked by China’s Northeast Project,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ases of historical and cultur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existence of this issue has had an invisible and passive effect on friendly intercourse between two countries for a long time. Over the past years, Korean academia has always made this issue an important concern, while China has not shown much interest. At present, awareness of the problem of the attribution of Goguryo history in China is still built on past research theories. In fact,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Chinese historial theory and the perception of concepts related to nation, ethnicity, and frontiers etc .in academia have changed greatly from before. Based on this realistic background, this paper aims to combine the new trends in the study of Chinese national history, review the theoretical construction issues in the narratives of Chinese national history in the past, and then reflect on several cognitive fallacies made by Chinese scholars in the dispute over the historical attribution of Koguryo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양양 / 楊楊 / Yang, Yang				
	소 속	上海外國語大學 東方語學院				
	Em@il	0184101191@shisu.edu.cn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0.09.28	심 사 일	2020.10.15	게재확정일	2020.11.02